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269호 | 2011년 7월 15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심지연 | www.nars.go.kr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원 종 현 *

1. 들어가며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GDP 대비 85.9%인 801조 4천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¹⁾ 가계부채는 2000년~20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면서 경상 GDP 증가율(7.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월 말에 이미 70%에 육박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과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상대

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점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의 우선기조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삼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왔다.

1)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년 6월 29일.

즉,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는 OECD 평균수준으로 가계부채부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거

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 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항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시키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변하는 주기와 금리 수준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1> 가계부채 추이

(단위: 조원)

	1999	2002	2005	2007	2009	2010	2011
가계신용	214.0	439.1	521.5	630.7	733.7	795.4	801.4
■ 가계대출	191.9	391.1	493.5	595.4	692.0	746.0	752.3
- 은행	76.3	222.0	305.5	363.7	409.5	431.5	435.1
· 주담대	-	-	190.2	221.6	264.2	284.5	289.9
- 비은행	115.6	169.1	188.0	231.7	282.5	314.5	317.2
(상호금융) ¹⁾	37.8	45.7	77.8	101.4	132.2	154.8	157.4
(여신전문사)	16.2	57.1	23.8	30.7	31.5	36.3	36.9
· 주담대 ²⁾	-	-	-	46.6	64.6	73.1	75.0
■ 판매신용 ³⁾	22.1	47.9	28.0	35.3	41.7	49.4	49.1

주: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1) 단위농·수·축협, 삼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판매신용은 카드사 신용판매 및 여전사 및 판매회사 제공 신용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년 6월 29일.

3.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계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은 정부에서 생각하듯이 관리가능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구조가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분할상환보다는 일시적 대출상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자 거치식이 많아 선진국의 가계대출 구조와는 달리 대출자는 금리위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저신용층의 상환능력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대응방안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서민가계 대출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제2금융권)에서 급증했음에도,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6년과 이후인 2007~2010년을 비교할 때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8%에서 5.66%로 하락하였지만,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4.90%에서 11.41%로 높아졌다. 이는 제도권 은행들의 서

민가계에 대한 대출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말 현재 카드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49.0%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에 경험한 '카드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기 대출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0%를 넘고 있으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비중도 78.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정금리 원리금상환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의 이자율 차이로 인한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까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30% 정도로 증가시키도록 은행에 강요한다면, 오히려 서민가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주택자금구입을 위한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²⁾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20% 소득자의 부채 가운데 자영업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분위의 가계대출 목적 가운데 사업자금

2) 서영수, 「가계 부채의 실체는 자영업자 부채」, 키움증권 산업분석 report, 2011년 7월 1일.

마련이 34%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담보 성격이 취약한 데다 담보 비율도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에 의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약 78%의 대출이 아직 거치기간에 있거나,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 단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낮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본격적인 부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와 맞물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 위험은 증가될 것이다.

4. 나가며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위기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이것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서민 대출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서민구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확보된다면, 가계부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저 신용자들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발표하였듯이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대책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면 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소득의 증가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래 금리인상에 대비한 서민금융 구제방안과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채상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도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방안과 동일한 비중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입니다.

※ 본 내용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